"안보라인 구멍" "국정원 뭐하는 곳이냐"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15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지도부, 금강산 피격 사건 한목소리 질타

'핫라인' 실용성 싸고 前·現 정부 '책임론' 공방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15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 내 안보라인의 보고체계와 상황대처, 후속조치 등이 미흡했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돼야 하고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기민성이 없었다"면서 "연락이 몇 시간씩 늦은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BBS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금강산 피격 사건 때 보여준 국가정보원은 뭐 하는 집단인지, 월급을 받고 뭐 하는 집단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청와대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1시간30분인가 2시간 걸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세들"이라고 몰아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우리 안보라인에 상당한 구멍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가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 책임 전가 논란은 박 대표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모든 역대 정권이 대북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얼마나 뽐냈느냐. 그런데 지금 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결국 이전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과대선전을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을 했다.

그는 나아가 "기본적으로는 북측에서 사건 자체를 장시간 동안 감췄고, 북측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적으로 정부가 알 수도 없었다"며 "특히 북한은 판문점에 설치된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우리의 주장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 정부로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감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핫라인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격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회 긴급대책회의에 와서 '당국 간 라인은 있지만 사실상 가동되지 않아왔다'고 말했다. 당국 간 라인은 공식라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라인조차 사실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또 "남북관계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신뢰가 끊어지면 복구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는 북한을 자극하고 짧은 시간에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공격했다.

그는 나아가 "공식 라인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수정돼야 한다"며 "자성하고 현실에 맞게 남북관계 실정에 맞게 교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혜영 "경제팀 포함 내각 전면 바꿔라"

국회 대표연설 "고환율 정책 고집 국정 혼란 초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 파탄을 초래한 내각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해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선 "지난 10년에 대한 부정적 평가, 구시대적 리더십, 잘못된 정책 등 이명박 정부가 3가지 함정에 빠져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며 포문을 연 뒤 "현실에 맞지 않는 고환율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해 민생경제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 부대'와 '헌 술'을 모두 갈아야 한다"며 "신뢰 상실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경제팀을 중심으로 현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본의 중등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통보하자 기다려달라고 답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인용,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자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옆집 사람이 등기하겠다고 하자,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무엇을 왜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어야 했는지 저간의 사정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 원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정확한 진상 조사가 급선무인 만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과의 채널을 복원하고 진상파악에 착수해야 하며 북한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문희상 의원

18대 국회 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민주당 문희상 의원(4선, 경기 의정부 갑)이 선출됐다.

문 의원은 15일 소속 의원 81명 가운데 79명이 참석한 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3명 기권)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표를 얻어 33표를 얻은 박상천(5선, 고흥·보성) 의원을 눌렀다.

앞서 문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6표로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승리를 거뒀다. 1차 투표에서 박상천 의원은 28표를, 김영진 의원(5선, 광주 서을)은 15표를 각각 얻었다.

문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전체의원 투표를 통해 여당 몫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4선)과 함께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여당에서 야당이 된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하면 잘되는 것이지만 못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각오를 다졌다.

문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지낸 데 이어 참여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중진이다. 조화와 포용의 리더십을 내세우며 당내 다수파인 열린우리당계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에 이어 야당 몫 국회 지도부까지 열린우리당 출신이 모두 독식함에 따라 민주당의 색깔이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앙당 국장 살리려 당규 바꾼 민주당

시·도당 사무처장 중앙에서 파견

예산권까지 주며 지방 장악 노려

구조조정을 앞둔 민주당이 중앙당 당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6개 시·도당의 핵심인 사무처장을 중앙당 국장으로 순환인사토록 은밀히 당규를 바꾼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임명한 시·도당 사무처장에게 예산권까지 준다는 방침이어서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당직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해온 시·도당 사무처장(중앙당 국장급)을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해 사무총장이 임명한다'는 당규(38조 4항)를 지난 6월 중순 만들었다. 이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국장들이 16개 시·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며 그동안 시·도당에서 활동해온 당직자들은 배제된다.

더욱이 이들 중앙당 국장들을 지방에 갑자기 파견할 경우 지방 당직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견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처장에게 예산권까지 주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 중앙당의 행태는 각 지역의 대의원이 선출한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중앙당의 허수아비로 만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무처장을 지방에 파견,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당규의 개정은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당세가 급격히 약화된데 따른 중앙당 당직자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은밀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현재 중앙당 국장급 30%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당규를 통해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앙당 국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 당직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6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달 초 만나 새 지도부에 개선 대책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고위원회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재순 도당위원장 한나라 최고위원에

한나라당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재순 〈사진〉전남도당위원장과 송광호(충남 제천·단양)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재순 위원장은 호남 배려 차원에서 낙점됐고, 18대 총선의 유일한 충청권 당선자로서 송광호 의원은 당내 친박 및 충청 몫이 고려돼 발탁됐다.

새 사무총장은 주류이자 친이재오계 인사인 3선의 안경률 의원이 일찌감치 내정됐다.

또한 당 대변인에는 재선인 차명진 의원이, 전략기획본부장과 홍보본부장에는 재선인 이명규 사무1부총장과 김충환 의원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